

정부 단속반이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대표 샤벌 타파(네팔) 씨를 표적 연행해 이주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서울 혜화동 로터리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샤벌 씨는 갑자기 달려든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5명에게 연행됐다. 샤벌 씨는 곧바로 여수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돼 강제출국 위기에 처해 있다.

샤벌 씨의 연행은 한국정부가 명동성당 농성단을 본격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표적단속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농성단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자진출국 후 재입국' 안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 해산한 일부 농성단과는 달리 지난 10일 이주노동자 815명의 '자진출국 거부서명'을 발표하며 출국 거부 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농성단 고육선전팀 강현주 씨는 "정부의 연행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성단이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계속 집회를 열고, 자진출국 거부서명을 받기로 한 것 때문에 법무부가 위기를 느낀 것 같다"며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게다가 정부가 2월말까지 출국을 유예해 사실상 단속이 중단된 상황임에도 샤벌 씨를 계속 미행하다 연행한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지원대책위 최재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도 "정부는 농성단 대표만 잡아들이면 농성단의 조직력이 급격하게 약해질 것이라고 오만한 것"이라며 "농성에 참여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도 정부안을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무조건 출국부터 시키려는 '알락한 품수'를 버리지 않는 한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명동성당 농성단은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표적단속 속에 강력히 항의했다. 앞으로 법무부 앞 규탄 집회와 함께 농성 100일 제인 22일에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법원이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

1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오민석 판사는 대전충남건설노조 이성휘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해 '원청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협상에서 산업안전 미비 등을 이유로 협박, 금품을 갈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성휘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재동 씨 등 5명의 조직 활동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탄압 상황을 조사·보고하면서 '검찰이 노사합의로 이뤄진 단체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 수사를 짜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004년 2월13일자 참조>

지역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품갈취 행위로 공소 제기 한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고스란히 받아 들인 데 대해 진상조사에 참여한 인권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씨는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및 '협박'으로 보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갈취'로 단죄한 검찰의 논리가 사법부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이성휘 위원장도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더욱이 이 위원장은 "검찰에서는 고소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고소고발한 사측 관계자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건설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산업연맹, 인권사회단체들은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판결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담당판사 황의동)재판부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하재용 씨 등 6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하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30만원, 노종욱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과 한총련 대의원 등의 건에 대해서는 '초범'을 참작하여 비교적 경미하게 다룬 한편, '자주대오'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노 씨는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라면) 어느 학교에서든지 '자주대오 조직' 사건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보수세력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보적 학생들과 한총련을 탄압하고자 하는 빌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 씨도 "이

번 사건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이 힘의 관계를 바꿔내려고 한 공세"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현역군인 2명과 추가 연행자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1. 이라크 파병·한-칠레FTA 끝내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가결...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 운동 펼치겠다고 밝혀(2.13)/ 국회 본회의,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가결...농민들 대규모 집회, 거센 저항으로 맞서(2.16)
2. 졸렬한 표적 단속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자진출국 거부' 선언(2.10)/ 명동성당 농성단 사멸 타파 씨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연행...여수보호소로 강제이송(2.15)/ 이주농성단, 서울 목동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표적수사에 항의 규탄집회(2.16)
3. 노동자 죽음 줄이어
비정규직 차별 항거하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 씨 분신 사망, 산재요양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자 유석상 씨 자살, 사회보험노조 전 서울본부장 박동진 씨 수배중 간암으로 숨져(2.14)
4. 기타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의인사 석방탄원서 줄이어(2.10)/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보류, 진상규명법국민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10)/ 세계식량 계획, 북한에서 실시해 온 어린이와 고령자 등 400만명에 대한 식량배급 2월 초부터 중단한다고 밝혀(2.10)/ 정보통신부, 2003년 국정원 통화 내역 조회 7,281건(작년도 대비 40.5% 증가)이라고 밝혀...검찰 지휘 안 받는 대테러보안국 통한 편법 사용 드러나(2.11)/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김도현 씨에게 실형 8개월·박경석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2.11)/ 서울대 황우석 교수 등 국내 연구진, 체세포핵을 이식한 배아를 이용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발표...참여연대 과학기술센터 '생명윤리법 논란 속 배아복제 연구 무리한 강행'이라고 성명 발표(2.12)/ 부안핵폐기장 주민투표 실시 결과 반대표 91.83%로 집계(2.14)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18일 (수)
제 25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2.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3.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단식돌입
4. 조이어울의 인권이야기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법중운동 전개할 터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시민단체·인터넷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법중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터넷언론인·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동대위)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중 82조5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의견게시물을 하는 자가 가입하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 한 뒤,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견게시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8조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는 '정치·사회·문화·시사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개인 등의 홈페이지도 이 규정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향후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 추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법중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온라인 시위 △메일 보내기 △배너달기 △국회의원 면담 등 항의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게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때 행정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신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정보 통제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이 점에 대해 인터넷 언론인과 공동대위는 "이들 정보는 각각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실명인증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본래의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명인증제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도 특정 인터넷 언론사만이 아니라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나 개인 등 선거계시판을 운영하는 광범위한 다수로 그 정의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1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근로자 공급 사업'을 벌여 온 '아비스', '유니에스'와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 병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은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간병인 유료 소개 업체 '아비스'와 '유니에스'를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 아비스와 유니에스는 간병인 유료소개소 즉, 간병인을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직업소개소'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간병인의 채용자격, 교육실시, 근무성적 평가' 등에 대해 병원과 협약을 맺고 노동자를 파견 형태로 공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사무소는 지난 2일 이들 유료소개 업체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씨는 "이런 불법 형태의 노동자 공급의 원인은 지금 까지 무료 간병인 소개를 맡아 오던 서울대 병원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애매한 소개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뿐 아니라 공급 받는 서울대 병원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병원이 그동안 환자 치료와 관련해 중요하게 맡아 오던 간병인 무료소개소 운영을 포기하면서 빚어지는 일이라는 것.

공대위는 노동부의 불법 판정이 있었음에도 서울대 병원에서는 버젓이 이들 유료 간병인 소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기자회견 후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청 조주현 청장과의 면담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6개월 째 무료소개소 운영을 요구해 온 서울대 병원 간병인 노조에 대해서 조 청장은 "간병인 노조가 서울대 병원에 소개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처음으로>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단식돌입

강제연행 항의집회에 또다시 강제연행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연행이 잇따르자 이주노동자들이 단식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이미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깨비, 렉, 샤멀타파 씨뿐만 아니라 명동성당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 소속 마슴 씨 등 7명의 이주노동자들은 17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농성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단식투쟁선포대회'를 열고 연행된 이주노동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마슴 씨는 "노동권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하게 싸워왔다"며 "농성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는 게 더 좋다"고 답답하게 밝혔다. 또한 "9명의 이주노동자가 죽어나가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단식을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죽어도 좋다. 그래서라도 한국과 세계에 이 상황을 알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4명의 이주노동자 단식단은 하나같이 "동지들이 석방될 때까지 죽어도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집회가 끝나고 해산할 무렵, 경찰의 비호 아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결국 농성단 소속 굽다 씨가 또다시 연행되었다.

이날 집회 장소 주변에는 50여 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잠복해 있었고, 미리 차량을 준비해놓은 걸로 미루어,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단속의 전형임을 알 수 있었다.

<기사 처음으로>

조이어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술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요구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건을 보니, 아주 전형적인 풍경이다. 모 초등학교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교사들에게 술을 죽 들렸고, 교감이 '여선생님'들을 지명하며 '교장선생님'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것. 교사들은 거부했고 교감은 제차 요구했다.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는 교사들이 진정한 이 사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며칠 전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성희롱 결정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아랫사람이윗사람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윗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고, "여교사들에게 술을 권하도록 한 원고의 말에는 성적의 의미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돼있다. 덧붙여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회식자리에서 '여성'직원으로 하여금 '상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 이런 행위는 남성들에겐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고통'이다. 이는 수직적인 권력관계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강요' 받는 일이며, 노동현장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이 결코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때문에 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성희롱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술자리 예절'을 언급하며, 여교사들이 처한 상황을 가뿐하게 미화시켜 버렸다. 직장상사가 미리 술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가 중요한가? '내 술 받고, 네 술 받자'식의 성희롱은 늘 있어왔다. 교감이 '여 선생님'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것은 교사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법원이 교감의 언행에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도 황당한 일이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성적인 의미'란 무엇인가. "나랑 자자"고 해야 성적의 의미가 포함된 것인가? 여성들이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란 성관계에만 국한된 것인가? 재판부의 법적 지식이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성역할 고정관념, 여자는 '사무실의 꽃'이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몸가짐과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것이다.

'예절'과 '사회통념'을 언급하며 여성에게 강요되는 술 따르기 문화(성차별, 성희롱 문화)를 감싸주고, 한 술 더 떠 여성노동자들이 느낀 굴욕감마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한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오판이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법원의 판결로 인해 평등한 노동권을 쟁취하려는 수많은 여성들의 노력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이어울 님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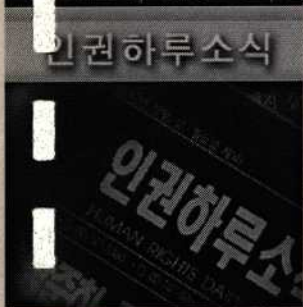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19일 (목)
제 25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안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유족을 두 번 죽이려나
2.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3. '비정규직과 여성' 이종의 모순에 같하다

유족을 두 번 죽이려나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전국 유족들 한나라당 항의

지난 7일 한나라당이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보류하자 유족들이 연일 항의방문, 농성,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경기, 대전, 경남 등 전국 8개 지역의 유족 100여 명은 17, 18일 해당 지역 한나라당 지구당을 방문,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자진상규명및 명예회복에관한법률'(아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미 지난 13일 유족 300여 명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바 있다.

부경유족회 이규희 씨는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이 국민적 지지로 법사위까지 통과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폐기가 뻔하다"며 "도둑놈이 제 발 저린다고 한나라당은 학살을 감추기에 급급할 뿐, 묻혔던 과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청군 시천·삼장유족회 정맹근 씨는 "50년 넘게 한을 안고 살아왔는데 거대 야당의 반대로 상황이 이렇게 되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고 "유족들이 고통이어서 세월 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며 애끓는 심정을 전했다.

17일 김희석 씨 등 부경유족회 유족 20여 명이 오전 10시 한나라당 부산지부를 항의 방문 하는 것을 필두로 거창지역 유족들은 지구당 앞에서 6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했고, 대전유족회는 한나라당 중구·북구·유성구 등 지구당 방문 이후 대전 역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법 제정을 호소했다. 또한 18일 10시 전주형무소 유족은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지역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산청군 시천·삼장유족회 유족 10여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남 산청 한나라당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유족들의 이런 대응은 19일 16대 국회가 사실상 마감되면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 2001년에 입법 발의되어 1년 반 넘게 묵혀 있다가 2003년부터 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공론화됐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과거사특위를 구성해 과거사 관련 법안을 심의하였고,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물역사적 인식이 막판 '발목잡기'로 작용,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과 반세기 넘도록 숨죽여 살아왔던 수백만 명 유족의 한맺힌 호소와 기다림이 또다시 외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고 김훈 중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 1천2백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지난 99년 12월 김 중위 유가족들은 '김훈 중위 사망사건' 조사에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실을 은폐·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 1심 재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조사없이 10분만에 현장검증을 마치고 현장훼손을 방지한 점, 타살임을 입증할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증거물 등을 간과하고 소홀히 다룬 점, 사체 보존 등을 소홀히 한 점, 그리고 관련자들의 알리바이 조사에 형식적으로 임하여 알리바이 조작의 빌미를 준 점' 등 초동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수사의 잘못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유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의혹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성급한 자살 판단으로 '국가가 죽음의 원인에 대한 유족들의 알권리와 명예 감정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초동수사의 잘못이 2차, 3차 수사에서 진상이 규명될 수 없었던 이유라고 보고, 3차 특별합동조사단의 사건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조사관은 "사건의 은폐·조작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점은 1심과 같은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고 씨는 "재판부 역시 자살·타살 의혹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의혹이 제기되는 군대 내 의문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든지, '의문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중위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국방부 중심의 특별합동조사는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으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에 있어서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아니라 특별검사 형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중위 사망사건의 조사는 1, 2차 국방부 조사에 이어 99년 4월 특별합동조사단에서도 자살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법원이 김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자·타살의 진상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사망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재조사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 진 셈이다. 한편, 김 중위 6주기 추도식은 24일, 명동 가톨릭회관 7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비정규직과 여성' 이중의 모순에 갇히다

흥국생명, 임신한 여성노동자 계약직 빌미로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노동자 중 56.6% △정규직 남성 월평균 임금 202만원, 여성 131만원. 비정규직 남성 월평균 임금 116만원, 여성 77만원 △전체남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46.7%, 전체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70.7%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2002」

위 통계는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 구조에 관한 단면이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그 경계선은 비교적 명확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선,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선. 그 경계에는 고용형태와 성별분화라는 차별이 존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를 넘어선 차별은 비정규직의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 확대의 일차적 피해자는 바로 여성이다.

임신하자 계약해지 통보

최근 해고를 당한 최경자 씨 사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 씨는 5년 동안 영양사로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왔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재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최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린 지난해 8월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최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난 13일 기각 판정이 내려졌다. 경기지노위는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해고했다'고 해명하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애초에 최 씨는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출산 기간 2개월 이후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회사측과 구두로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는 구두합의를 파기하며 최 씨를 '해고'했고, 10만원 낮은 임금으로 새로운 영양사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최 씨가 근무하는 흥국생명 연수원에도 19명의 노동자 중 무려 14명이 비정규직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이 나자 17일 흥국생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과 승진, 인사, 배차 등에서 차별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최 씨의 부당해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박탈이자 여성 노동자의 모성기본권을 동시에 깎아내린 반인륜적 행위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적이면서 게다가 여성인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도 역시 기각 판정에 굴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계약직 노동자는 출산휴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라며 "임신을 하면 해고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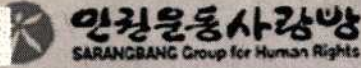
여성 비정규직 빈곤 심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특히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은 평가절하 되고, 여성은 항상적인 저임금 구조와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사와 출산·양육이 사회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면서 쉼 없는 경우처럼 여성들은 해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해고는 임금의 박탈로 이어져 빈곤을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여성을 빈곤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20일 (금)
제 25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죽음으로 말하다
2.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3. 이북 '식량권' 빨간불
4. 여성의 목소리로 듣는 노동자 가족의 현실 - 「현대가족 이야기」

죽음으로 말하다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지난 14일 새벽, 조선업계 세계 1위라는 현대중공업(아래 현중)의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50세)씨가 분신 사망했다. 박 씨의 옷웃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 실현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혀 있었다.

2002년 현중 사내하청 인터기업에 입사한 고 박일수 씨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원청인 현중과 인터기업으로부터 계속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인터기업 사장은 박 씨의 휴직을 조건으로 임금 체불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4개월 후 어떤 개선조치도 없이 박 씨를 강제 해고했다. 박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모든 것이 현중의 직·간접적 인 배후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박 씨의 분신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웅어리진 분노를 마침내 토해내고 있다. 박 씨와 인터기업에서 함께 근무해온 한 노동자는 "우리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업체 사장이 부르는 '일당 얼마'가 근로계약의 전부"라며 "월차, 연장근로수당, 산재는 모두 딴 세상 얘기"라고 소리를 높였다. 현재 150개에 달하는 현중 사내하청업체의 1만5천 여명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당제 혹은 시급제다. 이들은 현중 정규직 노동자들과 한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임금의 60% 밖에 못 받는다. 그나마 최근에는 일당제가 시급제로 전환되면서 임금은 더 줄어들고 있다.

작업환경과 노동강도로 말하자면 70년대가 따로 없다. 노동자들은 "비오는 날 가스로 가득한 탱크 안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전기선을 목에 감고 일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잘리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사내하청 노동자"라고 말한다. 지난해에만 현중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나 파로로 사망했고, 그중 7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문제는 사내하청이라는 고용형태다. 현중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2000년경 급속히 늘어나 현재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러한 사내하청의 증가는 고용주의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착취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자본가들의 속셈이 숨어 있다. 사내하청노조 송충현 조직국장은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을 중간착취하는 인력 소개소에 불과하다"며,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시킬 책임은 직접 작업지시를 내리는 현중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중에게 사내하청의 가장 큰 매력은 노조 파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조직국장은 "하청노동자들이 노조활동 깃 새라도 보이면 현중은 해당 업체를 폐업시킨 다음, 조합원들을 뺀 노동자들만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 한다"며 치를 떨었다. 노조를 만들면 업체를 날려버리는 탓에 지난해 설립된 사내하청노조에서 공개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이는 8명에 불과하다.

현중은 박 씨의 죽음 앞에서도 "박 씨는 우리와 상관없는 제3자"라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해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한편 또 한 명의 열사가 안치된 영안실 주변에서는 "하청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낯선'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63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 선언...네티즌도 동참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사회 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는 1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에는 학술단체와 환경단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2차 선언을 발표하고,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인론기자협회와 함께 홈페이지(www.freeinternet.or.kr)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본격적인 실명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체 게바라'라고 밝힌 네티즌은 프레시안 독자토론란을 통해 "정치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이나"고 묻고, "(정치를) 당신들의 당신들에 의한 당신들만을 위한 관치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관치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말할 권리"라며 실명제 반대사를 나타냈다. 최근 실명제와 관련한 '선거법 불복종운동 동참 여부'에 관한 인터넷 한겨레의 설문조사에서 총 2,340명 응답자 중 73.5%인 1,719명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은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반대를 표명했다.

<기사 처음으로>

이북 '식량권' 빨간불

식량지원 바닥나...세계식량계획 긴급 지원 호소

개선의 조짐을 보였던 이북 사람들의 식량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유엔 구호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원조를 받던 이북 사람들 중 4백만 명이상이 최근 지원이 끊긴 채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의 마수드 하이더 대북 특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식량재고가 바닥 나, 식량 지원이 필수적인 어린이, 여성, 고령자 등 4백만 명이 넘는 주요 수급자들에 대한 식량 지원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오직 입산부 7만5천명과 고아원·병원에 있는 아동 8천명만이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을 받는 상태다. 세계식량계획은 그간 영양 결핍이 심하고, 최소 영양을 확보할 수 있는 생계수단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량 지원을 해왔다.

하이더 특사는 "조속히 곡물 지원이 되지 않으면, 건강의 손상은 회복이 어렵고 질병과 영양실조가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1990년대 후반부터 힘들게 이룬 이북 주민들의 영양 상태 개선이 다시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고려할 때, 식량 사정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식량계획은 시장 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경제구조조정 여파로 불가피하게 북한 내 농산물 가격의 인플레이가 심한데다 도시빈민층이 늘어 이북 주민들이 식량 지원 중단 사태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좋은벗들' 이승용 평화인권부장은 "북한은 자체적으로 농경지가 부족하고 필요한 식량의 절반 가량 밖에 생산을 못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에 의존해왔다"며 "그런데 지원이 줄어 식량이 많이 부족하고, 전기 부족으로 상수도 공급이 원활치 못해 식수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세계식량계획 차원의 식량 지원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된 것은 2002년 9월부터다. 주요 대북 식량지원국이었던 일본이 납치자 문제 등을 고려해 2001년 이후 지원을 아예 중단했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했다.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651만3천4백 명에게 약 48만5천 톤 분량의 식량 지원 계획을 세우고 1억7천1백만 달러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등이 곡물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는 4월경에나 도착할 예정이고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이마저도 6월이면 고갈된다. 하이더 특사는 원조량의 감소를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치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며, 이달 말 있을 핵 문제 관련 6자 회담 이후 상황이 진전되기를 기대했다.

하이더는 "인도적 책임을 다하는 게 지금 당장 시급하다"며 이북에 식량을 서둘러 지원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이승용 부장은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등의 대북 강경정책, 국내의 퍼주기 논쟁 등으로 시달려 왔는데,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북에 대해서도 "제한된 지원 물자만이라도 최약자층에게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식량권은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식량권에 관한 일반논평 12에서 "국가들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식량권이 잘 향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식량은 결코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기사 처음으로>

여성의 목소리로 듣는 노동자 가족의 현실 - 「현대가족 이야기」

클릭! 인권정보자료

지은이: 조주은 / 기획: 퍼슨웍 / 펴넛곳: 이가서/ 348쪽/ 2004년 1월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가족의 생생한 현실을 보여 준 책이 나왔다. 현대차 노조간부를 남편으로 둔 저자가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생산직 노동자의 아내 18명과 가진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이 책은 '가정 중심성'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가족 내부의 가부장성을 파헤치고 있다.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은 생계부양자(남성)와 가사전담자(여성)로 구성된 '가족모델'이 가능케 하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남성 노동자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되는 강도 높은 장시간 주-야간 교대 근무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종속된 단순 반복적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 남편들에게 가해지는 극심한 노동강도와 파로사의 위협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을 안쓰럽게 여기면서 '내조'에 주력하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남녀의 위계질서와 성별분업은 더욱 공고해지며, 그녀들의 일상 역시 남편의 필요를 위한 '항상적 대기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성별과 학력으로 철저하게 위계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아내를 '집에 묶어두고' 싶어하는 남편들과 부딪혀야 하는 그녀들에게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이외에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다.

저자는 안정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는 기업의 가족전략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이러한 가족전략은 남성노동자들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지만, 모순적이게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노동에 대한 착취 구조와 가부장의 특권이 서로 맞물려 있음을, 나아가 '가정 중심성'에 대한 강조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억압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저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 이 책에 등장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노동자 가족 전체의 삶으로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가까운 예로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 가족에서 전업주부란 존재할 수 없다. 한달 임금이 100만원도 안되는, 전체 노동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중층적인 억압구조를 드러내는 일은 또 다른 성찰을 필요로 한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21일 (토)

제 25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2. 의문사범 '서로' 떠넘기기
3.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4.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논평>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열사가 되어버린 이름, 박일수.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현대왕국' 하청노동자의 절망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야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강제해고라는 철퇴를 맞고 좌절해야했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가 세상에 남긴 석 장의 유서는 자본의 착취에 죽어가면서도 싸울 엄두조차 못내는 하청노동자의 응어리진 분노로 쓰여졌다. 악랄한 자본의 차별은 모멸감을 넘어 하청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정규직노동자의 반박에 안되는 임금은 뼈 속까지 시린 빈곤으로, 밤낮 가릴 것 없이 이어지는 연장근로로, 빗 속에서도 고압 전기줄을 목에 감고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현장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몰아갔다. 그러나 노동조합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면 하청업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탓에 하청노동자들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을 도리밖에 없다. '단결권'을 보장한 대한민국 노동법은 하청노동자들 앞에서 멈춰버렸다. 거대한 현대왕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일말의 희망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 이러한 하청노동자들은 만 5천명. 전체 노동자의 1/3에 달한다. 이는 2002년에 비해 6천여 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싼값에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는 자본의 탐욕이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폭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보다 안정적인 착취구조를 만들어가려는 자본의 속셈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자본의 뒤를 봐주기에만 바쁘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을 은폐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마치 대공장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강성노조 때문인 양 정치 공세를 펼친다. 그러나 정작 경제자유구역 등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 바다를 향한 죽음의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다. 분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은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이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현대중공업은 열사의 죽음을 왜곡하면서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주기에도 여념이 없다. 함께 싸워야할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는 자본의 장단에 같이 춤을 추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파고드는 분열공세에 동승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분열전략의 최종 도착지는 전체 노동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경쟁이며, 지금 비정규직의 분노와 좌절은 내일 정규직이 맞닥뜨릴 절망이 될 것이다.

희망은 노동자 계급의 강고한 연대와 단결뿐이다. 분열을 만들고 비정규직 철폐를 함께 외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기사 처음으로>

의문사범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50일간 국회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에서 표류하던 '의문사건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범)'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가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9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18일 유영태 운영위원장과 3당 수석부총무들은 의문사법을 법사위에 보내기로 합의 하고, 19일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여 남은 국회입 시 회기 동안 의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확실 한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앞에서 38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 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은 "의문사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국 회에게 있다"며 "단약 의문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는 입법부작위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법사위의 책임회 피를 짊어 수 있다. 의문사위원회 조사시한을 없애고 조사권한 강화를 주 골자로 하 는 의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오세훈 의원 등 61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의문사 법을 제 개정하는데 관여해 온 법사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지난 해 두 차례나 개정안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의문사진상규명위 원회 전 상임위원 김준곤 변호사는 "의문사법 개정과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할 법사위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국회의장과 운영위원회로 거둬 버리는 모습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며 "법사위 거부는 시간을 끌어 의문사법의 자동폐기를 기대하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문사법 개정안이 16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올 6월 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돼 풀리지 않은 의문사들은 역사 속에 문 힐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의문사 유가족들은 21일 아침 8시 박관용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의문사법 개정 안을 법사위로 빨리 회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 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개악 집시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권사회단체의 불복종운동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반인권, 반민주적 개악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 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도 로에서의 행진금지,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금지, 소음규제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두고 인권사회단체는 '집회·시위 금지법'이라며 인권침해를 우려해 왔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가협 등 개정 집시법 대책을 논의해 온 인권사회단체들은 법 시행에 맞춰 내달 2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를 발족, 본격적인 대응을 해 나 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가협은 개악 집시법을 반대하며 이미 지난달부터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 다. 매주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목요집회'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 련해 20일 종로경찰서로부터 3번째 출두요구서를 받았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기 존의 집시법도 집회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제한하는 법이었다"고 지적하며 "평화적 집회를 위해 그동안 신고를 해왔지만, 기본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개악된 집시법 은 불복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각계의 개악 반대 목소리도 무참히 짓밟 고 의견표현력 절차마저 갖추지 않은 채 통과한 법에 대해 최후의 항의 수단은 불복종밖 에 없다"며 "목요집회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반인권적 집시법을 계속해서 거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연대 주재준 씨는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허가제나 다름이 없 다"며 "개악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재준 씨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한다든지, 집회신고 금지가 통과된 장 소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불복종 운동을 검토하고 연석회의 발족 이후 벌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복종 운동과 함께 헌법소원, 집시법 재개정 추진도 계 획에 포함되어 있다.

한 차례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없이 강행된 집시법 개악에 분노하는 인권사회단 체들의 저항이 임박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부안 반핵투쟁과 일본 피폭노동자들의 증언 기록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수시로 마주하면서도 2백여 일 동안 계속 되었던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 이 험한 시간을 이끈 주된 동력은 "그 어디에도 핵폐기장 유치는 안 된다"고 외치며, 정부를 향해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던 부안 주민들의 건강한 민심에 있다. 2월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에서는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는 주제로 '현재 진행형'인 부안 반핵 투쟁의 의의를 되새겨 본다.

첫 번째 상영작은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영상기록>이다. 이 영상물은 피약될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부터 시린 겨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계속 되었던 부안 주민들의 힘겹고도 역동적인 투쟁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의 기록물이다.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하고 알파한 말바꾸기를 지속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상당수의 부안 주민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한 채 촛불을 손에 쥘고 민주광장으로 나선다. 카메라는 이같이 온갖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부안 주민들의 반핵 의지 그 면면을 포착한다.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에서 제작한 이 영상물은 몸소 현장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부안 주민과 활동가들의 촬영으로 완성되었다.

독일 감독 니콜라스 윌이 만든 <핵발전소 단지>는 일본 오사카 근방의 핵발전소에서 일했던 노동자들과 유족들의 증언을 엮어가면서 피폭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부각시킨다. 한국과 더불어 핵발전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며, 제3세계 국가들에게 핵산업의 확장을 피하는 일본 사회의 우월한 어제와 오늘이 비춰진다. '선진국' 일본의 요란한 허상 뒤에 감춰진 피폭 노동자들의 피폐한 이미지들을 마주하다 보면, '핵' 자체가 품고 있는 위협에 대한 섬뜩함이 절절히 다가온다. 더불어 이 작품은 핵관련 시설이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산업'의 구성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핵산업의 수직적인 피라미드 그 꼭대기에는 거대 자본이 안착해 있는 반면, 일상적으로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이 불가피하게 피폭 노동자로서 삶을 강요당해 산송장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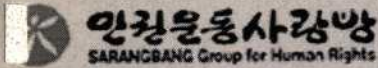
영화 상영 후, 부안 반핵 투쟁에 적극 동참했던 활동가를 초청하여 "핵 발전이 저렴하다" "원자력 에너지가 깨끗하다" 등 정부 및 핵 폐기장 유치를 찬성하는 측 주장의 허구성을 짚어 본다.

△때 : 2월 28일(토) 오후 3시 30분
 △곳 : 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 (<http://www.mediact.org/center/map.htm>)
 △문의 : 02-741-2407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24일 (화)
제 25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한-일 FTA가 오고 있다
2.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3.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과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한-일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체결을 반대하는 양국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일 FTA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부터 동경에서 시작된 한-일 FTA 2차 협상에 맞춰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투자과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조처들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혜택을 가져다 줄 뿐이고,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한-일 FTA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2005년 이내 한-일 FTA 체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힌 정부는 지난 12월 일본 정부와 1차 협상을 가졌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한-일 FTA 산·관·학 공동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양국 정부가 협상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 보고서는 '한-일 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제국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과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여 파괴하려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지난 20~30년 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파업권 등 기본권이 자본의 세계화에 방해가 되는 '장벽'이나"며 "우리에게 장벽이 되는 것은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지적재산권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것, 단지 다른 나라에서 노동한다는 이유로 탄압 받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국장도 "현재 15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인데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서면 이들은 대체 어디 가서 자신의 병든 몸을 맡길 수 있겠나"며 FTA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한-일 FTA 1차 협상을 가진데 이어 1월에는 싱가포르 정부와도 FTA 1차 협상을 벌이는 등 FTA 협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맞춰 자본의 세계화를 막기 위한 각계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기사 처음으로>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정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23일 오후 2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정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여경 활동가는 "그 동안 이 조합이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낙인찍으면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편견을 조장,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국가와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검열'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사무국장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우 씨는 "청소년기에 성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청소년은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을 크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정말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동성애혐오증을 야기시키는 인터넷 사이트부터 차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성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기에 왜곡된 정보를 듣고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혐오하거나 건강에 대한 위험 행동을 하게 되므로 단순한 피임교육이 아닌 각각의 성 정체성에 기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는 청소년 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보위에 전달했다. 한기총은 "소수 인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소위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9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아래 정개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혁위가 법사위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실명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개혁위는 국민을 위대한 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치현실을 뜯어고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오히려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몇몇이 이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들을 근거 없이 헐뜯고 비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정치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비판은 줄어들지 몰라도, 국민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정치인들에게는 득이 되지만 국민에게는 실이 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인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정치인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권력에 도전하거나, 국민다수와 배치되는 비주류 견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보복의 가능성 때문이다.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검열'과 닮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본래 언론자유란 부작용을 전제로 하고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즉 언론자유가 오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자유를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윤리를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표현조차도 '사전검열'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후 그에 대한 처벌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언론자유가 오용가능성이 명백한 데에도 언론자유를 불가침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사회라면 진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없고,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정책은 부패정산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에 의한 것이다. 정개혁위도 그래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국민여론은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오랫동안 점령되어 온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보다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은 퇴화되었고, 정치부패와 부조리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그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이 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 때문에 언론의 사실은페나 여론조각이 힘들어졌고, 권력자들도 국민여론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은 모든 국민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진정한 공론장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정개혁위는 일부 부작용을 없앤다는 명분 하에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하려 들고 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그야말로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 헌법을 유린하고 여론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에게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장호순님은 순천향대 신문방송학 교수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1. 이주노동자 투쟁은 계속 된다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7명 단식 돌입...농성단 사멸 대표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이주노동자 또 강제연행(2.17)/ 법무부, 이주노동자운동과 강제출국거부운동의 파장을 우려...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예고/ 명동성당농성투쟁단 농성투쟁 100일차 총력투쟁대회 개최... 강제추방저지, 전면합법화, 사업장이동자유 주장(2.22)

2.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원 4명,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크레인 점거농성 단행...사측에 폭력진압돼 경찰에 연행(2.17)/ 민주노총,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책임자처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가져(2.19)/ '비정규직 차별 철폐·노동탄압 분쇄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넷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2.20)

3.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 확산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반대기자회견 가져, 국가인권위 인터넷 실명인증제 반대의견 표명(2.17)/ 63개 사회단체 1차 불복종 운동 선언(2.19)/ 32개 사회단체 2차 불복종 운동 선언(2.20)

4. 기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회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로 35명 인정/ '민중의 스승 고 김진균 선생 민주사회장' 진행(2.17)/ 청년실업률 34개월만에 최고, 8.8%(2.19)/ 조합원 징계에 항의하던 전국공무원노조원 51명 전원 연행(2.20)/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 5명 중 1명 비정규직" 연구 발표(2.22)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25일 (수)

제 25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비정규직 함성, 울산에서 전국으로
2. ▷ 즐거운 물구나무 ◀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어요!
3.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4.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5.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새로 임명

비정규직 함성, 울산에서 전국으로

서울 현대사옥 앞, 비정규직 철폐·현중 규탄 집회 열어

24일 전국비정규노동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연대회의)는 박일수 씨 분신과 관련 현 대중공업(아래 현중) 서울사무소가 있는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을 규탄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중 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박일수 씨가 분신한 지 일주일일이 지났지만 현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현중은 울산지역 곳곳에 유인물을 뿌리며 사태를 왜곡하고, 구사대를 동원해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서 연대회의 박대규 대표(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는 "오늘의 집회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투쟁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박일수 열사 투쟁'이 울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분열되어선 안된다"며 "진정으로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박일수 열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중 사내하청노동조합원 진용기, 조광한 씨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하게 조합원임을 드러내고 현장에서 공개적인 조합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박일수 열사의 죽음 앞에 침묵한다면, 만천하에 우리 스스로를 노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중 자본의 탄압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공개활동을 선언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인간선언이 더욱 값진 것"이라며 지지했다. 현중 사내 하청노동조합은 기자회견 후 "회사 측이 이들에 대해 끊임없는 협박을 가하고, 작업을 시키지 않은 채 계속 사무실에 대기상태로 두었다"고 밝히면서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과 서울에서 연일 집회와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현중 서울사무소 앞 집회에 이어, 28일 울산에서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수 씨 사망으로 울산을 비롯한 영남지역과 서울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철폐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기사 처음으로>

▷ 즐거운 물구나무 ◀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어요!

열 좌석에 앉아 있던 40대 가량의 남성은 당황하고 불쾌한 듯한 표정이었다. 좀 전까지 태평한 표정에서 울그락 불그락해진 얼굴, 작지만 거친 중얼거림. 다름 아닌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어요!"라는 말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말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마음 편하게 좌석에 앉아서 가게 됐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불쾌감을 알려줬다는 후련함에 한결 가벼운 기분이 된다.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어요!" 지하철이나 좌석버스, 극장 등 좁은 좌석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 바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과 연결된다.

특히 30분씩 혹은 1시간 이상을 낮 모르는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있을 것을 생각하면 자리를 찾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은 좌석을 찾아 앉을 때 우선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옆 좌석에 누가 앉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30분 이상 되는 긴 시간을 자칫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든지, 아니면 도중에 앉는 것을 포기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낮을 밝히며 대판 싸움을 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심사숙고'의 1순위는 옆 좌석의 성별. '다리 벌리고 앉은 남성'을 피해서 마음 편한 자리를 찾는 것이다.

'다리 벌리고 앉은 남성'에게 불편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고쳐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낮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이상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 주변 사람의 불편을 배려하거나 혹은 타인의 시선을 생각해서 '다리 오므리고 앉기'를 요구받아 본 적 있을 리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바로 '불편'의 위험을 무릅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큰소리 치며 '뭘 잘못했나'고 말하는 적반하장 말이다.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거나 나이 어린 남성일 때와는 달리 나이 많은 남성이라서 느끼는 '말하기 어려움'은 바로 좌석버스의 비좁은 공간에도 존재하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억압 관계이다.

'다리 벌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다리를 오므려 달라'고.. 그리고 '다리를 오므려 달라'는 말이 못 들을 말이라도 되는 양 '놀람'과 '불쾌감'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비좁은 자리에서 주위 사람을 위해 다리는 마땅히 오므리면 되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군 의문사 방지대책 마련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권고는 과거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한시적인 독립기구 설치와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한 군 수사체계의 민주적인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 수사체계 개혁하라

국가인권위는 수사의 지휘권이 이해당사자인 군 지휘관에게 있는 점이나 보안규정을 근거로 한 수사과정의 폐쇄성 등이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한 조작, 은폐를 수월케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군사법원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상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 폐지 △보안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수사내용 공개 △사체 검안·부검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이다. 더불어 과학적이고 철저한 초동수사를 위해 △군 수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사망사고 발생 시 불과 24시간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잠정적인 사망원인을 보고하도록 한 내부규정 개정 등도 이번 권고에 포함됐다.

독립적인 진상규명기구 필요

또한 국가인권위는 과거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현재 국방부 내의 특별조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정한 제3의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 마련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이는 사실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주문한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군 의문사와 관련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54건의 진정 중 대부분이 군 수사가 진행·종결되었거나 1년 이상이 경과된 사안들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각하사유에 해당돼 진상규명의 길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나왔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군의문사 진상규명 및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아래 군가협) 주중우 회장은 "환영한다"면서도 "좀 더 일찍 나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16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마당에서야 특별법 제정 권고를 내린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 회장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은폐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더 이상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폐쇄된 공간, 군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 의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국회와 국방부가 이번 권고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기사 처음으로>

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온 통지서를 통해 "귀하를 예비판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지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예비판사의 임용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 이외에 경력, 연령, 직무수행능력, 인품, 자질, 성격, 건강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음"을 통고한 것 이외에 이 씨가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씨는 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예비판사로 임용될 만큼 상위권 성적(976명 중 73등)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이 씨는 제기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14일 임용심사를 위한 면접에서 '법관 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학생운동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이 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당시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느냐,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 동조했었느냐, 당시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1월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7년 3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1999년 8.15 사면조치로 사면되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 씨는 "법원이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 들어가서 서로 토론해야 한다"며 "기존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제시킨다면 어떻게 신뢰를 받겠느냐"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씨는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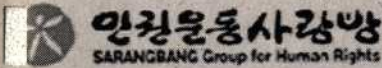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새로 임명

유엔은 캐나다 대법관이자 전 유고슬라비아·르완다 전쟁범죄재판소 검사였던 루이제 아르보르 씨를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루이제 아르보르 씨는 지난 해 8월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테러로 사망한 전 세르지오 비에이라 드 멜로에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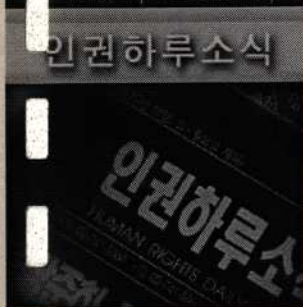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와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26일 (목)

제 25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죽음을 부르는 일터
2. <기고> '인간 배아복제' 실험과 그 비판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2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산재해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 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안전보건 제도를 개악하려는 경총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정부와 기업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안전보건 제도의 개선'과 '요양관리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산재는 자본에 의한 살인

지난 1월 한달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4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과 관련, 5일 노동부와 검찰은 산재 사망의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안전담당 이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제인총연합회(아래 경총)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사법권 남용' 등을 거론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날 집회에서도 경총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운 사업국장은 "산재 사망은 결코 우연이나 노동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경총에 있는 경영 관리 자들에 의한 살인"이라며 "상무 이사를 구속할 게 아니라 기업주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3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 갔다"며 "매년 2천5백 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어 가는 이 나라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절규했다.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산재로 인해 노동자가 떠 안는 고통은 생존을 위협한다. 지난 14일 산재요양환자 유석상 씨는 "수술한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청구성심병원노동조합 김명희 조합원은 "20여 년 동안 일해 왔지만, 산업재해로 1년 6개월 동안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에 의존해서 살아 가고 있다"고 토로하며 "산재 환자들이 가족들과 같이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말했다.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

금속산업연맹은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평균 벌금 3백 만원 정도이며, 구속율은 평균 0.001-2%이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약 2천5백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이러한 산재사망률은 영국의 20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5~10배 수준이라는 것.

지난해만 보더라도 9월까지 2천1백54명의 산재사망자가 집계됐고,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를 대하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가 여전히 '강건너 불구경'이라는 데 노동자들의 분노가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유해·위험에 대한 익명의 신고제 도입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등 지도·감독 강화 △산재보험 급여 심의 기간 준수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지침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기고> '인간 배아복제' 실험과 그 비판

생명윤리, 인권 침해는 나몰라라

[편집자주] 지난 12일 서울대 황우석·문신용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해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생명윤리와 인권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배아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만들어 낸 실험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됐던 다른 복제 실험과 달리 이번 실험은 사이언스 인터넷 판에 게재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인간배아복제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의학적 가능성이 큰 줄기세포를 얻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는 파킨슨씨병, 척수 손상,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치료에 이용되는 대체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 방법으로 기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의학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의 출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줄기세포는 배아복제, 인공수태 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 태아조직, 성체(成體) 조직 등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분화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줄기세포는 주로 수정란에서 분화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배아에서 얻을 수 있는 논란이 되어 온 것이다.

국내에서 배아복제 성공은 이미 몇 차례 보고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실험과 다르다. 기존의 체세포 복제는 소의 난자에 사람의 핵을 이식하는 이종간 핵이식 실험이었던 반면에 이번 실험에서는 사람의 난자에 사람의 핵을 집어넣었다. 사람의 난자를 사용한 것이 이번 실험의 핵심이자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동안의 이종간 핵이식 기법은 창출된 배아에 동물의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서 사용이 어렵고,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섞는 윤리적 문제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생명윤리와 인권침해 논란

하지만 이번 실험은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와 인권침해 논란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우선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주장으로 인간배아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복제나 불임클리닉에서 만들어진 인간배아의 파괴가 필수적인데 초기 배아를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아닌 인간으로 보는 가톨릭과 같은 종교계의 입장에서 보면 용납하기 힘든 실험이다.

또한 복제를 통해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면 복제인간이 태어날 수 있다. 이번 실험은 인간 난자를 통해서도 체세포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시켜 준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인간 개체 복제를 추진하고 있는 유사종교 집단의 주장이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무시되고 있는 여성의 인권

이번 실험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인간 난자 사용은 '여성의 몸'을 대상화·상품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받고 있다. 배아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다량의 난자가 필요하다. 이번 실험에서는 16명의 여성으로부터 얻은 242개의 난자가 사용되어 한 개의 줄기세포를 얻었다. 그런데 다량의 난자를 얻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불가피하다. 여성은 많은 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과배란제를 맞아야 하고,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고, 난자는 실험의 재료가 된다. 인간배아복제 실험이 활성화 된다면 인간 난자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 난자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불임클리닉에 냉동 보관 중인 잔여 배아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생각해 보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외신은 인간 난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돼

일부 시민단체는 실험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험이 진행된 2003년은 생명윤리법 제정 논쟁이 한창 이었고, 인간배아복제의 허용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연구진들이 실험을 강행한 것은 책임 있는 연구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들은 이번 실험이 기관심사위원회의 윤리적 평가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적 고려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보도 찬반을 넘지 못해

이번 실험을 다루는 언론의 편향적 보도 방향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언

론들은 배아줄기세포의 가능성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보도했고 기껏해야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만 다루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배아복제 논쟁에서 드러난 △배아를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 △체세포 복제의 문제점 △배아연구의 대안인 성체 줄기세포의 가능성 △난자를 제공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 △과학자 내부의 이견 △불임클리닉 문제 등의 다양한 논의들은 소개하지 않았다. 대중에게 배아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제공해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찬반 갈등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언론의 모습은 거의 없었다.

'세계최초'라는 의미는 기술적 인정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겪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제는 일방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인간배아복제가 국내에서 성공한 이유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성찰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병수, 홍의대 강사, 과학기술학]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27일 (금)

제 25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2.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3. 멕시코 자유무역시대,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4. 클릭! 인권정보자료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고용불안, 노동착취의 주역인 '파견노동'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에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노동부는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 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했다.

죽음으로 의친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를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화답하는 정부의 방침에 노동자들은 할말을 잃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개선안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인식과 원칙이 변화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며 "파견노동을 종래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파견업체에만 파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꼼꼼히 보면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파견업체가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파견업종의 확대는 파견업체의 난립과 경쟁을 부추겨 파견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파견노동의 확대가 실업해소와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의 주장에 대해 김위원장은 "말장난이다"라며 "정규직 1명 쓸걸 파견노동자 2명 쓰느냐? 정규직 노동자가 파견노동자가 될 뿐이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개선안의 또 다른 문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차별을 했을 때 '차별구제위원회'를 두어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선 파견직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은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대거 전환될 것이며, 결국 파견업종의 확산은 정규직을 줄이고 파견 비정규직을 더욱 늘려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8년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 정규직이 정리되고 된 자리는 파견직으로 채워졌다. 그 기간 동안 사용업체의 책임회피와 파견업체의 중간착취는 '고용불안과 차별, 노동법상 무권리'로 고스란히 파견노동자들에게 부담되었다. 2년 이상 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한 채 그 직전에 쫓겨났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 등으로 차별을 겪었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사용업체가 계약을 해지하기 일쑤여서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합법화된 무권리, 고착화된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은 '파견제 확대 속의 차별 금지'가 아니라 '파견제 자체의 폐지'여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국회가 청송 피감호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내팽개쳤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는 지난해 9월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제출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미루어오다가 임시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야 '실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심사 1소위로 넘겨 버렸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 1소위는 이후 회의 날짜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들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합승회 의원은 "사회에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 흉악 범죄에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합승회, 김용균 의원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을 요구하고, 깊은 논의는 법사위 심사 1소위(위원장 합승회)로 넘겼다. 이 같은 반대 의견과 촉박한 임시 국회 일정상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법사위 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활동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저 가두두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작태"라며 법사위의 결정에 분개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며 1백4일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조석영(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씨는 "피감호자와 가족들의 호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며 "절대 약자임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조 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4년 동안 즐기치게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는데, 국회의원들은 듣지도 못했나"며 절규했다.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절절한 호소와 사회 각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내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기사 처음으로>

멕시코 자유무역지대,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노동자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 등...국내 사회단체 항의편지 보내기 확산

멕시코 국경의 자유무역지대 따마우리빠스주 지역에 입주한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국내에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인권사회단체의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다.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에 따르면, 한국기업 '행성'은 멕시코에 있는 LG전자의 4개 부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고용승계 등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3일 행성은 LG전자를 인수하면서 현지 노동정의조정청에 노동자들의 근속연수, 임금, 단체협약 지속 등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간 LG전자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은 근속연수, 임금, 단체협약 등이 지속되지 못한 채 건강보험조차 취소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열악함도 호소하고 있다. LG전자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은 하루에 7달러(약 8,400원)의 임금을 받으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일해왔다. 또한 환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납, 알콜, 분드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들 다 투여 두통, 어지러움, 복통에 시달려 왔고 결국 이런 노동조건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유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달 14일 350명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주지사에게 개입을 촉구하고, 잔업을 거부하며 저항했으나, 23일 노동자 6명이 해고되기에 이르렀다. 24일부터는 공장 주위에 경찰력이 배치돼 노동자들을 사전체증 하는가 하면, 행성은 '아스펜'이라는 하청기업을 이용,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멕시코 노동문제연구소와 마킬라도라정의를위한동맹은 24일 국민행동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오며 연대를 요청한 상태이다. 국민행동 전소희 씨는 "이번 사건은 멕시코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늘어가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며 "세계화·신자유주의 반대운동 차원에서 국내 단체들이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동은 현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노동계와 인권사회단체를 중심으로 LG전자와 행성측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26일까지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여 개 노조 및 사회단체가 LG전자 김상수 사장과 행성 허맹 사장 등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해고노동자의 원직 복직 △노동자 권리 준수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최근 노조 및 사회단체들이 항의팩스를 연이어 보내자 행성본사 경영기획실과 LG전자 현지공장은 "사실무근이다" "조사해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항의서한 문의 전화 02-778-4007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절망의 '분할', 희망의 '연대' - 『사내하청노동자와 인권 자료모음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묶음 / 170쪽 / 2004년 2월

지난 14일 '절망의 공장, 죽음의 공장'이 되어버린 현대중공업(아래 현중)의 노동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현중의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고 박일수 씨는 노예문서와 다름없는 '하청노동자'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아찔한 사고와 생존의 위협, 불안정한 삶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죽음으로 웅변했다.

인권정보자료실이 묶은 이 자료모음집은 사내하청 노동의 반인권성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치열한 저항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노동연구」에 실린 신원철 교수의 글은 현중에서 사내하청 제도가 형성되고 재편되는 과정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에 실린 이병훈 교수의 글은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에 기반하여 '고용형태의 차이'가 정규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의 작업장내 '신분관계'로까지 고착화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지난해 「비정규노동」 20호가 특집으로 기획한 <사내하청 실태와 조직화>에는 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의 확산을 국가가 조장해 왔음을 밝히고 있는 신원철 교수의 글, 금속연맹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한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태연구"(2003.3)의 요약 발췌문 등이 실려있다. "현중 사내하청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조선업종 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례" 역시 하청노동을 둘러싼 착취구조를 읽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자료모음집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존재가 전체 노동운동에 던지는 도전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닫고 일어서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고 있는 「질라라비」 수록 글들도 가려 묶고 있다. 또 INP중공업, 캐리어, 신호제지, 현대자동차 야산공장, 기아자동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투쟁한 사례들을 조사·분석한 글들은 현실의 강고한 벽을 보여주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넘어선 연대만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뼈아프게 일깨워준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28일 (토)
제 25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2. 화성외국인보호소, 빗장 걸다
3.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4. <알림>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5. 2월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6.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1998년 2월, 파견 노동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파견제란 무엇인가? 사람을 돈 주고 파는 것, 혹은 돈 주고 사람을 사와 일을 시키는 것의 세련된 이름이다. 역사 속에서 이것의 진실한 이름은 '노예제'였다. 파견제가 중간 착취와 고용 불안,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동반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전까지 이른바 파견노동이 금지됐던 데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현대판 노예제'의 합법화 시도는 계속 이어졌고 97년 말 아 이엠에프까지 여기에 가세했다.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대했으나, 정부는 불법파견을 규제하는 동시에 양성화된 파견노동자들은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리하여 끝내 노예제는 부활되고 말았다. 그것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란 기만적인 이름으로.

그 이후 6년,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박탈당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주기적인 해고 통보로 삶은 극히 불안정해졌다. 기업들은 파견제를 임금 비용 절감과 자유로운 해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고, 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되었다. 파견제는 사무보조, 청소용역, 운전직, 텔레마케터 등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얼굴들의 노동과 생활을 일그러뜨려 놓았다. 불법파견도 규제되기는커녕 사내하청, 용역 등의 이름으로 더욱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참함에 대해 노동자들은 집단행동으로, 때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응답은 해고요, 가난이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죽음은 노예 상태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지막 절규이다.

그런데, 정부는 파견대상 업무를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도 명분은 그럴 듯하게 차별해소다. '비차별'이란 인권의 원칙은 차별받는 집단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차별을 낳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의 정규직 일자리까지 파견직으로 만들면서 '무권리 상태의 평등'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차별해소'일 수 있겠는가! 임금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파견제의 존재 이유인 이상, 애초부터 파견제와 노동자의 인권은 나란히 갈 수 없는 것이다.

파견직을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이 빈곤의 심화로 이어지고, 건강하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하지 못하는 것인가. 노예를 늘리는 것이 '노예제'의 개선책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파견제를 폐지하라!

<기사 처음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 빗장 걸다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강제연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구금하고 있는 화성의국인보호소(아래 보호소)가 인권단체의 면회를 거부, 인권유린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오전 인권단체이주노동자지원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정부의 집중단속 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보호소를 방문, 면회를 신청했으나 보호소측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보호소측은 직원 10명을 동원하여 보호소 정문을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면회 신청인의 민원실 입장도 막아섰다. 거듭되는 면회신청 요구에 보호소는 "보호소장의 지시로 오늘은 면회가 안된다"며 "돌아가라"고 답했다. 대책위의 항의에 보호소는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소장이 면회를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호규칙 30조를 들이대며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책위 최재훈 활동가는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면회를 거부하는 것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규가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바라보는 국가나 공무원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외국인 보호소를 사회적 규제나 감시 없이 무방비로 남겨 뒀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면회신청거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보호소 내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호소 내 단식농성중인 이주노동자에게 7일이 지난 후에야 의약품을 전달한 보호소측을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 17명 이상이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보호소측은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포함해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에 맞서 여수보호소, 명동성당 등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모두 22명에 이른다.

정부의 강제연행과 노동권 박탈에 맞서 생명을 건 이주노동자들의 단식이 12일째를 맞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대대적인 단속만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사 처음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빈곤과 실업 관련 대책이 사실상 '가난한 노동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 주최로 열린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빈곤·실업대책의 반인권성이 가감없이 폭로되었다.

'참여복지' 공허한 선언, 기만적 술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해 '알고 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층이 340만 명에 육박한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0만 명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수급자 수를 5년간 불과 20-40만 명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 조차 위협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복지예산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 그나마의 대책들도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연대 전 대표 강동진 씨는 "정부의 복지대책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확대'라는 신빈곤 현상을 타개할 어떤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불안정한 노동의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회협약은 '더 불안하게, 더 가난하게'

기만적인 속임수에 불과한 복지정책 위에서 정부는 가난한 불안정 노동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들을 안심하고 펼칠 심산이다.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의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사회협약)'이 그 예고편. 사회협약의 주요 골자는 △규제완화, 금융·세계 지원과 노동유연성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임금억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그러나 사회협약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이기보다는 차라리 더 많은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로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자본과 정부의 '선전포고'이다.

이는 사회협약의 핵심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도 말했듯이 한국경제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으로 들어섰다. 기업이 아무리 잘 돼도 고용창출로는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애초에 '자본에게만 좋은 것'으로 의도됐으며, 실업을 해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더욱 불안한 노동만을 안겨줄 뿐이다. 이에 대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현재 실업문제의 본질은 노동자들에게 실업

과 구직의 악순환을 강요하는 노동의 불안정화에 있다"며 사회협약은 이러한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사회협약은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분담 시키는 내용으로 일색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부문은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고 한 규정은 마치 실업문제가 고임금에 있는 것인 양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역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다. 사회협약 어디에도 실업문제의 주범인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를 규제하는 방안은 없다.

사회협약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실업의 위기를 관리하려는 것에 불과한 이상 그것은 더 이상 '사회협약'일 수 없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에 드리는 또 하나의 먹구름, 이른바 북한자유법안이 지난 해 11월 미국 상, 하원에 모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은 북한인의 인권보호 북한 민주주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북 라디오 방송의 연장, 북 주민의 탈북 지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이러한 북한자유법안은 탈북이 곧 인권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의 의도가 대량 탈북 유도를 통한 북한 체제의 붕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질게 풍기고 있다. 이에 3월 2일 낮 2시에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때 : 3월 2일(화) 낮 2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제 :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입법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

- 유정애(미 코넬대 박사과정)

북한자유법안 분석 - 김승교(민변, 변호사)

△토론 : 한반도 평화와 법안-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경남대 교수)

북 인권과 법안 -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향후 대응방향 - 정육식(평화네트워크), 김성란(통일연대)

<기사 처음으로>

2월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상영작>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영상기록
·핵발전소 단지

▷ 장소 : 영상미디어 센터 대강의실

▷ 시간 : 2월 28일(토) 3시 30분

<기사 처음으로>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1. 비정규 노동자 죽음으로 말한다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하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 씨가 분신 사망하고, 산재 요양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자 유석상 씨가 자살하는 등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또 수배 중이던 사회보험노조 전 서울본부장 박동진 씨가 간암으로 숨을 거뒀다(2/1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원 4명이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된 크레인 점거 농성을 단행하다 경찰에 연행됐다(2/17).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인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2/20). 비정규직 차별철폐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부가 오히려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 노동계의 분노를 샀다(2/24). 노동계는 '개선안은 현대판 노예제의 확산'이라며 반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2/25).

2. 막가는 국회...추가파병, 한-칠레 FTA 본회의 통과

3당 대표가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한-칠레 FTA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자(2/4), 여성단체 등 사회 각계는 파병찬성 국회의원과 국방위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며 파병 반대운동에 돌입했다(2/2~13). 그럼에도 국회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키며 침략전쟁에 또다시 부끄러운 한 발을 내딛었다(2/13)

또 시민사회·농민단체들은 '한-칠레 FTA는 초국적 자본에 농업을 팔아치우는 행위'라며 국회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2/6~16). 국회 본회의에서 한-칠레 FTA 논의가 시작되자, 경찰은 국회를 겹겹이 에워싸고 국회 밖에서 'FTA 비준 반대'를 외치는 1만6천여 농민·학생들에게 물대포와 방패세례를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정경수 씨 등 많은 농민과 학생이 부상을 입었다(2/9).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는 한-칠레 FTA 비준안 가결, 농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2.16).

3. 이주노동자 자신출국거부에 정부 강경 대응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단은 고용허가제 실시와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박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2/6). 이어 이주노동자 815명은 '자진출국 거부' 선언을 발표(2/10)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정부는 농성단 대표 사멸타파 씨를 표적 연행,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시켜 버렸다(2/15). 연행 구금된 이주노동자 등 7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저항이 이어지자(2/17), 법무부는 강제출국거부운동의 파장을 우려하며 대대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을 예고했다(2/21).

4. 청송피보호감호자 피눈물을 삼키다

600여명의 청송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며 6번째 단식 농성을 전개했다(2/6). 사회각계원로·인사 312인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선언, 국회가 조속히 폐지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2/4).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피보호감호자와 사회 각계의 요구도 무시한 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법안심사소위로 폐지안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16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2/26).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